

2016 최악의 시민재해 살인기업 '삼성서울병원' 선정

8 변백선 기자 | ⓒ 승인 2016.04.15 16:39



▲ '2016 최악의 시민재해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살인기업 처벌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삼성서울병원으로 선정됐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사전예방과 사후대처 모두 실패한 이유다. 특별 상으로 역시 메르스 사태 확산에 기여한 이유로 질병관리본부를 선정했다. 또한 가슴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 기업들에게 책임 회피와 가건 은폐 행위에 몰두한 공으로 특별상을 수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해 세월호유가족협의회, 가슴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이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난해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한 기업을 선정하는 '2016 최악의 시민재해 살인기업 선정식'을 갖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취지발언을 통해 "한국은 산업재해 왕국이다. OECD 국가 중 한국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가장 많이 죽는, 한해 2천여 명의 노동자, 시민이 죽는 나라다. 이것을 방지하고 막기위해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여전히 총량 속에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오히려 산업안전법을 개악하는 조치들을 행하고 있다"며 "세월호 2주기가 다가오는 오늘 우리는 진실 규명을 통해 다시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환기하고, 시민재해 살인기업 선정을 통해 다시 한 번 자각하는 자리가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위한 자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 취지발언을 하고 있는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 변백선 기자



▲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삼성서울병원이 선정됐다. © 변백선 기자

세월호유가족협의회 준영엄마 임영예씨는 "참사 이후 바뀌어야 한다고 안전한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고 너나없이 외쳤지만 2년 동안 얼마나 더 안전해졌는지 묻고 싶다. 2014년 살 수 있었던 304명의 아까운 목숨을 구하지 않아 참사로 만들고, 2015년 정부·병원의 무력한 대처로 확산된 메르스 사태, 무분별한 안전규제완화가 원인이 된 의정부 아파트 화재 참사, 피해 발생 후 책임을 모멸하고 거짓을 일삼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참사가 계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월호인 것 같다"며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중요했던 기업의 비윤리적인 태도 등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도 앞선 가치로 존중되고 보살펴 질때까지, 국민의 안전과 안녕이 보장되고 책임지는 사회가 될 때까지, 피해자와의 굳은 연대로 진실을 밝히는 세상이 될 때까지 모두의 감시와 고발, 항의, 투쟁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해 5월 27일 14번 환자가 확진된 후 보건당국의 아무런 조치 없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면서 2차 확산이 시작됐다. 삼성서울병원에서만 90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당시 병원은 감염 예방을 위한 격리시설이 없었고 감염 환자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구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을 은폐하고 전면적 역학조사와 환자의 안전을 위한 폐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와 산재사망대책마련공동캠페인단은 "삼성서울병원은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느장 대응, 관리 명단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 시민들의 넋을 위로하며 헌화를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특별상으로 선정된 이유도 메르스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부적절한 대응으로 국가방역체계가 무너졌고, 당시 역학조사와 격리 시기도 놓쳤다.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메르스의 전파력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단하고, 밀접 접촉자에 국한된 비밀 감염으로만 전파가 된다고 설명하거나,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는 치사율이 낮다는 주장을 하는 등 위험정도를 축소했다.

이들은 "국가방역체계를 비롯해 공공의료체계부터 혁신하고 강화되어야 한다"며 "의료민영화 악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을 20대 국회에서는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특별상은 옥시, 애경, 롯데쇼핑, 홈플러스, 세퓨, 신세계 이마트, 엔워드, 코스트코, GS리테일, 다이소 등 가슴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에게 돌아갔다. 지난해에만 가슴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5명의 피해자가 추가 사망을 했고, 2013년~2014년 1~2차 조사 당시 확인되지 못한 희생자가 1명이 더 있었던 것이다. 가슴기 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 희생자가 지금도 늘어나고 있고, 2016년 4월 4일 현재 가슴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자만 모두 239명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 가슴기 살균제에 의한 폐손상과 사망자가 발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그해 12월 가슴기 살균제와 폐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실험 결과도 나왔지만 2015년 가슴기 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가 발표된 후 2016년 1월에야 전담 팀을 구성해 본격적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사망자가 확인된 가슴기 살균제 제조·판매 기업 모두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함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와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중단하고, 전염병 관리와 방역체계 전반에서 의료기관의 공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환경·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함께 시민의 알 권리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백선 기자 n7349794@naver.com